

## 북한사회의 평등성 : \*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전망과 관련하여

강 정 인

### I. 들어가는 말

근대 불란서혁명이후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인류의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체제의 동서, 빈부의 남북을 불문하고 현대의 모든 국가는 헌법에서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평등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사회정치체제를 비교·평가함에 있어서 평등의 실현도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평등이념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회의 역사적 경험, 문화적 전통, 사회경제적 구조, 정치제도, 이데올로기적 기반등 이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의 총체적 표현으로 정식화되기 때문에, 평등이념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sup>1)</sup> 제2차 세계대전 후 체제의 동서대립은 평등이념의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로도 반영된다. 남한사회와 북한사회 역시 분단이후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를 그 지도이념과 사회구성원리로 채

\* 본 연구는 1991年度 教育部 社會主義圈研究支援金を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P. Schwab and A. Pollis, "Liberal, Socialist and Third World Perspective of Human Rights," W·E·버틀러저, 박홍규옮김,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서울: 일월서각, 1988), 157쪽

택함에 따라 동일한 문화와 전통을 천년 이상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이념과 실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5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을 기폭제로 하여 목하 진행 중인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의 급격한 변혁 역시 평등개념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관해서는 한편으로 사회주의권 국가 일반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인과 다른 한편으로 각국이 겪는 변혁과정, 변혁주도세력, 변혁의 속도 등에 있어서의 상이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각국에 고유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원인은 다양한 시각과 상이한 이론적 틀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론상의 사회주의를 현실에 옮기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곧 사회주의 이론과 현실의 갭에서 그 원인을 구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정치·사회적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시민적 자유의 억압 또는 공산당의 일당독재-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라는 차원에서 변혁을 설명하는 시각도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sup>2)</sup> 또는 사회주의건설의 초기에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인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일정국면에 다다르자 경제발전이 한계에 이르르고 이에 대한 경제구조의 재조정에 실패한 결과, 경제발전이 둔화 내지 퇴보하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에 있어서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국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당과 국가엘리트들의 특권계급화로 인해 국내의 계층간의 갈등 역시 첨예화되어 개혁·개방이 일어났다는 설

2) 이는 엘리트와 일반대중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평등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는 권력의 행사와 통제에 일반시민이 자유와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의 문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 역시 가능하다.<sup>3)</sup> 이러한 상이한 시각에 따른 각각의 설명이 다른 설명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사회의 평등성이라는 시각에서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체제의 변화원인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70년대초까지 북한체제가 성취한 사회경제적 평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최근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의 와중에서 북한체제가 처한 상황을 국제적 불평등과 대내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변혁의 불가피성을 도출하고자 한다.<sup>4)</sup>

## II. 사회경제적 평등

### 1. 북한 헌법상의 평등조항

북한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차 1기회의에서 1948년에 제정된 「인민민주주의헌법」을 24년만에 「사회주의헌법」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사회주의헌법 중 사회경제적 평등에 관련된 조항들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

- 
- 3) 이러한 설명이 사회주의권의 변혁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혁명과 반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회구조나 정치체제의 부정이나 불평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다소 형식논리적이고 동어반복적이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구조적인 혁명의 원인은 사회구성원의 의식에 혁명적 변화를 도모하거나 수용하도록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이 글의 전반부의 내용은 강정인,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평등이념 고찰」(국토통일원, 1989)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그 글에서 글쓴이는 북한사회의 시민적·정치적 불평등성의 문제를 '표현과 비판의 자유의 부재', '정치적 다원성의 결여', '정치참여제도의 유명무실화(有名無實化)', '관료주의' 및 '개인숭배'의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을 구분하여 전자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 먼저 제51조에서 “공민은 정치, 경제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평등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개별 조항들을 통해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제58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제56조3문), 무료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59조),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권(제62조)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5조에서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라고 규정하며, 제26조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및 로동계급과 농민의 제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국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항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경제적 평등성을 검토해 보자.

## 2. 구체적 검토

### (1) 부 및 소득에 있어서의 평등성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배제되고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만 인정한다(북한헌법 제21조).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수에 의한 생산수단 및 부의 독점현상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 평준화현상은 원칙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남한에서도 전 국민의 소수에 불과한 사람과 기업이 전국의 부동산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적이 있지만 이는 남한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1960년의 조사는 전 국민의 5%가 사유재산의 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30년전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

5) 이 논문의 북한헌법 인용은 『북한개요』(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86)에서 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연도표기가 없는 한 인용된 『북한개요』는 1986년판을 지칭한다.

다고 한다.<sup>6)</sup>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부의 편재(偏在)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역사상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이러한 부의 편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누진적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부유세, 자본소득세 등 각종 조세제도와 기간산업의 부분적인 국유화, 기업합병이나 연합의 규제와 같은 각종 수단을 동원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부의 편재현상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분배의 측면에서 주로 완화하고자 하나, 사회주의사회는 아예 생산의 측면에서, 곧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하는 원천적인 처방을 쓰는 것이 그 특징이다.

북한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 해석에 의하면 사회주의 하에서는 아직 생산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필요한 소비품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회를 위하여 능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는 데 습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한 분배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사회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발견하여 그 능력발휘를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최소한 재화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평등화를 달성하는 것은 지난한 과업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에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배제되어 있어 자본소득(이자, 지대, 이윤)이나(개인소비 이외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증권투자나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 자는 없다. 따라서 북한에는 근로소득만이 존재한다. 북한사회에는 이론상 완전(평생)고용이 실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6) John Rees, *Equality* (London : Macmillan, 1972), P.30.

7) 사회과학출판사편, 『주체사상총서5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서울: 태백, 1989), 22쪽

하여금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실업으로 인해 인간이하의 생활수준으로 전락하는 데 대한 공포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생산의 능률을 기할 수 있지만 또한(실업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한)불평등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북한의 경우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실업이 없고, 또한 소득의 평준화를 위해 최대소득에도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로서는 인간성의 개조에 성공하지않는 한 생산성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물질적 자극과 도덕적 자극을 어떻게 배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의욕과 능률을 높이는가가 항상 문제된다.

북한의 소득분배구조는 조사의 시점과 조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에서 1:6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84년 현재 북한에서 최하의 경노동자의 월급이 60원에서 80만원이며 사무원부장급인 당정치위원이나 특급기업소 지배인이 300원에 350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남한의 경우 최저임금과 대기업의 사장정도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체로 30만원:400만원으로 잡아도 1:13이 넘는 수치이니 북한의 소득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81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숙련공의 연소득이 3만불, 대기업의 사장이 1.5백만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1:50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율이다.<sup>10)</sup>

8) 『북한개요』91쪽. 이러한 임금격차를 학력차이와 연관시켜 분석한 견해에 대해서는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고현욱의,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213-215쪽 참조.

9) 장인석, “고임금과 학력난”, 『신동아』(1991년 4월), 454쪽. 장인석에 따르면 섬유업체의 단순기능직 초인이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낮은 27만여원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소득분포가 고르다라는 위의 주장은 작소독단위당 소득자수의 분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것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10) Barrington Moore, Jr., Authority and Inequality under Capitalism and Communism (Oxford:Clarendon Press, 1987), p. 65.

따라서 북한사회에도 소득간의 격차에 따른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계층간의 실질적인 격차는 명목상의 화폐소득에 따른 격차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즉 화폐소득이 북한인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그 사람의 직업상의 지위에 따라 식량 및 피복보급, 주택의 규모, 특별의료혜택, 특별상점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차이는 화폐소득의 차이보다 클 것으로 여겨진다.<sup>11)</sup> 더구나 상층엘리트의 경우에는 저택과 별장 등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리라고 생각한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뒤집어서 남한이나 기타 자본주의사회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 대기업체의 중역이나 고급공무원들은 기본급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판공비, 차량유지비, 정보비등-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받는 명목상의 임금에다 여러가지 자본소득과 비공식소득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차이는 상층과 하층의 경우 더욱 크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sup>13)</sup>

그러나 여타 공산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엘리트 역시 이러한 특권을 공개적으로 누리지는 못한다. 즉 특별상점에서 무엇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권층이 그의 저택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지 일반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특권층이 모여 사는 구역이 따로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불평등을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감추고자 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이는 평등사회를 공언·지향하는 사회

11) R.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the Society* Vol. 2(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1282. 이러한 차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북한개요』, 87-89쪽 참조.

12) 월남한 사람들의 이에 관한 증언에 관해서는 월간조선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조선일보사, 1991), 92, 118쪽 참조.

13) 그러나 스킨라피노와 이정식교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스킨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1293참조.

14) 『북한, 그 충격의 실상』118쪽.

주의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의 암묵적 반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부와 소득에 의존하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우에는 개인이 차지하는 정치적 지위에 의존한다(politics in command).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국가에서 최고엘리트들의 장기집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인 레이건(Reagan)이나 포드(Ford)는 대통령의 지위를 물러난 후에도 자신들이 가진 재산과 사회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이전 사회주의국가나 북한의 엘리트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물질생활의 향유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신들의 공식적인 지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가 기댈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안락한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고급주택, 지방의 별장, 승용차서비스, 특별 의료혜택, 특별상점출입권 등이 하루 아침에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과거의 공산국가들의 경우, 최고엘리트들이 평생집권을 도모한 중요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권력승계절차가 제도화되지 않았다는데서도 부분적으로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 정치적 지위를 상실하면 그 지위에 수반하여 누리던 모든 특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켜줄 사유재산 등 사회적 기반이 공산국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권력의 수뇌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고급 당간부라 할지라도 그의 지위의 존속여부는 김일성이나 기타 그보다 높은 상층부의 뜻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상층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성취하고 정치적 풍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부의 지위가 자본주의사회의 유산계급출신 정치인처럼 안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다음 세대에게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정되는 사유재산의 상속이 없다는 점이 반드시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는 농민이나 육체노동자의 자녀보다도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집안의 지적·정서적 분위기가 또한 자녀의 교육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을 통한 대물림은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특권층의 자녀는 노동자나 농민의 자녀보다 어렸을때부터 출세에 필요한 인맥을 개발·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현재로서는(김일성의 친인척을 제외한)북한의 상층엘리트는 과거의 엘리트 집안출신이라기보다는 농민이나 노동자출신이 많고 북한의 사회주의 역사가 불과 40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배계층이 자기보존능력과 재생산능력을 획득하여 지배계급으로 고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sup>16)</sup>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도시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농민보다 높지만 그 격차는 소련이나 중국에 비교해서도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7)</sup> 이는 공업화를 위한 희생이 비교적 균등하게 부담되었음을 의미

15)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의 기회균등은 실현불가능하다는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Rees, 앞의 책, pp. 99-100.

16) 지배'계층'과 지배'계급'의 구별에 대해서는 P. Sweezy, *Post-Revolutionary Society*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80), pp. 130-31을 참조할 것. 북한의 엘리트구조를 김일성의 친·인척을 중심으로한 족벌체제로 파악하는 견해에 관해서는 유석렬, "김일성 개인숭배 및 권력승계," 전인영편,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90, 291-303쪽 참조.

17) 스킨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p. 1138, 1291. 그리고 두 교수는 1970년대에 있어서 빈농의 경우 북의 농민생활이 남의 농민생활보다 낫다고 보고있다(앞의 책, p. 1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농촌기피현상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그 충격의 실상』, 111쪽).

하며 농업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sup>18)</sup> 또한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경우 노동력이 희소하기 때문에 농촌의 잠재실업률이 낮은 데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70년대 초반 현재 북한은 지방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여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강력히 억제하여 중국과는 달리 실업이나 잠재실업이 도시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찰되었다.<sup>19)</sup>

무계급사회를 건설한다고 표방하는 북한사회주의가 비록 사회경제적 평등의 달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여러 제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사회의 상층부는 당 간부, 군장교, 일부지식인들이 구성하고 있으며, 그 밑에는 하급관리를 포함하여 노동자, 농민의 근로대중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70년초를 기준으로 성인의 10%에 해당하는 인민이 지주나 부르조아지의 계급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등시민으로 낙인 찍혀서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남한으로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스칼라피노와 이정식교수는 지적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나쁜 계급성분은 개인의 결혼 및 친구교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정불화 및 자살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sup>21)</sup> 이와 같이 계급에 의해서 한계 지워지는 인본주의를 북한의 한 지식인은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인본주의는 계급적 고려를 초월한 막연한 식의 사랑이나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본주의는 노동계급과

18)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1153. 두교수에 의하면 농촌의 전기화는 그것이 비경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 견지에서 일찍부터 시행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같은책, p. 1128).

19) E. Brun and J. Hersh, Socialist Korea(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p. 259;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1119.

20) 같은책, p. 764.

21) 같은책, pp. 764-65. 하지만 북한은 이들을 점차 사면하고 있다 한다(같은책, p. 835).

착취받는 대중에 대한 형제적 사랑과 커다란 희생을 그리고 적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투쟁심을 요구한다.”<sup>22)</sup>

## (2) 교육 및 의료

북한은 헌법 제59조에서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56년부터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채택한 이래 이를 점차 확대하여 1975년 9월에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sup>23)</sup> 19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이후부터는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1987년 한해에 10개 대학, 3개 전문대학이 신설되었으며, 그 결과 1987년말 현재 대학은 244개이며 대학과 전문대학에 49만4천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990년 현재 146만의 대학졸업자가 있다고 한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학력수준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중국, 홍콩, 남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sup>24)</sup>

이에 대해 북한의 노동자는 원래 이러한 비용을 공채하고 최저생계비만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학생들 자신도 의무교육을 받는 댓가로 노력활동에 동원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용품의 양과 질이 형편없다. 궁극적으로 김일성의 유일사상주입을 위한 도구에

22) 같은책, p. 875에서 재인용.

23) 『북한개요』, 116쪽

24) 『조선중앙연감』(1988); 서재진, “북한사회계층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민족통일연구원, 1991), 604-05, 614쪽. 그러나 이 통계는 북한은 1987/1988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중국은 1982, 홍콩은 1981년, 남한은 198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학력수준이 남한보다 높은지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

불과하다는 비판적 지적이 있다.<sup>25)</sup> 그러나 이는 비판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어설픈 변명처럼 느껴진다. 학용품의 양과 질이 형편없다라는 지적은 남한의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비판인지 모르지만 모든 학용품을 힘겹게 조달해야 하는 남한의 저소득층은 국가가 학용품을 무료 보급한다면 이를 적극 환영할 것이다. 학생들이 '노력활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노력동원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시한 후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노력동원은 어린 학생들에게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교육비용이 노동의 댓가의 일부로서 국가에 의해 적립된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한다면 왜 남한에서도 그와 유사한 교육세제도를 도입하고 의무교육제도를 확대하여, 빈부의 차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교육정책이 남한보다 앞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남한도 헌법 제31조 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중등학교 이상을 진학하는 데는 정신적·육체적 능력 못지 않게 재산의 빈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도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11년의 의무교육의 실시는 우선 형태적으로 북한의 모든 인민이 빈부에 구애받지 않고 11년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6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불과한 남한과 비교할 때 그 기간에 있어서 획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김일성 유일사상의 주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 역시 뒤집어 남한의 교육현실에 적용해 보면 '고등학교까지의' 남한의 교육제도 역시 자본주의적 가치의 주입, 유치한 차원의 반공교육, 그리고 현정권의

25) 『북한개요』, 116쪽; 김동환, "북한헌법에 있어서 기본권," 최종교 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 (서울: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88), 95쪽. 참고로 1991년판 『북한개요』 (통일원, 1991년)에는 이러한 비판이 삭제되었다. (293쪽 참조).

미화 및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제도교육이 원칙적으로 체제유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교육내용에 있어서—특히 대학교육이후—남한의 교육이 다원주의 정신에 따라 좀 더 체제에 관해 비판적인 정신을 허용한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에도 성인교육에 주력하여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하며, 공장대학제도와 통신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노동자에게 기계공학, 화학, 전자공학 등의 기술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교육제도는 엘리트양성보다는 대중교육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6)</sup> 1960년대에 북한당국은 100%의 산업노동자가 동시에 학생이라고 주장했지만, 좀 더 조심스러운 주장은 60%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sup>27)</sup>

의료시설의 혜택에 있어서도 북한헌법 제58조 1문은 무상치료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인민의 보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로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을 타체제에 우월운운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있다.<sup>28)</sup> 이러한 비판 역시 억지성이 짙은 것 같다. 남한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종래의 의료제도에 비해서 커다란 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를 자본주의 체제유지—노동력 재생산의 확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공박하는 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처럼 앞의 비판도 그 의미를 잃는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교수는 교육과 의료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의 북한인민은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기술하고 있으

26)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p.913, 916.

27) 같은책, p. 1290.

28) 김동환, 앞의글, 94쪽.

나,<sup>29)</sup> 이는 60년대말 70년대 초의 관찰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남한 간호원인 임성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병원은 약과 식료품부족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sup>30)</sup>

### (3) 남녀평등

북한헌법 제62조는 “국가는 여성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남녀평등에 대해서 『북한개요』는 “북한의 여성은 남자와 평등하게 정치·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가사의 사회책임화로 인해 여성들은 과거와 같은 가정의 주부 또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다.<sup>31)</sup> 여기서 “찾아볼 수 없는” 과거와 같은 가정의 주부 또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다소 항수적인 표현이나 이 구절이 여성의 가사노동을 통한 남성에 대한 종속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북한에서 남녀의 평등은 훨씬 진전되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취사제도, 식품가공공업의 발전, 탁아소 및 유치원시설의 확장과 모든 어린이의 사회적 양육,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들의 6시간 노동제 실시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32)</sup>

1976년 현재 북한여성의 노동참여비율은 48%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동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서

29) 스킨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1175.

30)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44쪽

31) 『북한개요』, 79-80쪽.

32) 김용기, 앞의 글, p. 215; 『북한개요』, 80-81쪽. 월남한 최봉래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 세명 이상 13세 이상의 아래이면 28호 대상이라고 하여 6시간 노동하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의 분만을 위한 산전산후 휴가가 77일에서 최근에 150일로 늘었다고 한다(『북한, 그 충격의 실상』, 87-88쪽).

구나 일본과 같은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직장을 갖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3)</sup> 또한 성별, 연령별에 상관없이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남한의 보수관행보다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그러나 여성노동은 일반적으로 보수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이는 여성들의 보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가구주로서보다는 가사보조수입으로 인정되는 데서 비롯하는 것 같다. 특히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미혼여성의 노동조건은 임금과 특별급여에서도 특히 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5)</sup>

전체적으로 볼 때, 공식적, 외형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활동에 널리 참여하고 노동참가율도 높은 것은 남녀평등을 위해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역시 가사노동의 제1차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족할만한 남녀평등은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36)</sup>

33) 김동한, 앞의 글, p. 98. 이창수의 조사에 의하면 역대최고인민회의에 선출된 여성의 비율은 약 20%에 이르며 이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이를 50%에 이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남한이나 많은 자본주의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이라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창수, “사회정책과 체제발전”,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법문사, 1985), 231쪽. 앞에서 인용한 이창수, 김용기, 김동한의 글은 북한사회의 평등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주로 무계급사회를 주장하는 북한의 이데올로기나 절대적 평등의 실현여부에 따라 비판하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요구로 어느 국가도 그들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을 결여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평등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본주의국가나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의 평등성을 옹미하는 방법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4) 『북한개요』(1986), 90쪽; 이창수, 앞의 글, 235쪽.

35)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1276.

36) 이은숙, “여성과 가족”, 최명편, 『북한개론』(서울:울유문화사, 1990),/329, 335쪽; 최봉례의 증언, 『북한, 그 충격의 실상』86쪽

### 3. 전체적 평가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수립이후 제3세계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sup>37)</sup> 그리고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하여 불로소득을 없애고, 자본주의국가 일반에 비해 훨씬 균등한 소득의 분배를 성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적소비의 증대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보다는 사회적·집단적 소비의 증대를 통한 생활향상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평등화되어있다.<sup>38)</sup> 더구나 문화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사치성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한인민은 다분히 금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가지는 화려한 내은사인 광고로 뒤덮여있지도 않다 한다.<sup>39)</sup> 자본주의사회의 제도화된 낭비와 부패에 환멸을 느낀 자에게 북한인민의 삶은 다분히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인민의 대부분은 남한의 중산층 정도의 생활에도 미흡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완전고용 하에서 기본적 생계에 필수적인 소득, 교육, 의료 및 주택은 대다수 인민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평등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민은 남한의 중산층이 누리는 “생활의 쾌적함”을 맛볼 수 없을지 모르나, 남한 주민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난, 산업공해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식품공해, ‘입시

37) 북한의 경제발전예 대한 비교적 객관적 검토에 대해서는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Stanford:Hoover Institution Press, 1974)를 참조.

38) 김종익, “긴 여행”, 양성철·박한식 편저 『북한기행』(서울:한울, 1986), 29쪽. 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심의 성장을 억제하는 집단적 소비의 증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Sweezy, 앞의 책, pp. 20-22 참조. 북한은 공장이나 집단농장에 있어서 노동자나 농민이 생산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시 개인적 보상보다는 집단적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Brun and Hersh, 앞의 책, p. 390).

39) Brun and Hersh, 앞의 책, p. 282.

지옥'으로 상징되는 치열한 교육경쟁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한이 소득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분배구조는 북한이 더 균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의 편차가 적고 외부로부터 배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인민은 남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와 전 시효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에 덜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냉장고, 전화, 텔레비전 등 남한사회에서는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내구소비재들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이러한 것을 구입하려면 몇 달씩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민대중이 기본적인 생활충족의 수준을 벗어나 문명의 이기(利器)의 혜택을 누리는 생산력이 이러한 소비수준을 전인민에게 누리게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소비품이 배급제에 의해 분배된다는 사실 역시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잇점도 있기는 하지만, 배급받는 사람이 중앙공급 대상이나 일반공급대상이냐에 따라 배급품의 양과 질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불만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수준이 남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배급제의 결과 생활고에 신음한다는 증거는 없다.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생활이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그리고 이러한 낮은 소비수준에 대한 불만제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게 위해서 북한은 외부사회 및 남한의 생활상을 알리지 않고 북한주민을 상기시킴으로써 북한주민에게 현재의 생활에 관해 상대적 만족감을 불러 넣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sup>41)</sup>

마지막으로 현재 달성한 평등의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북한이 지불한 댓가는 결코 적지 않다. 즉 사회경제적 평등이 인간의 다양성과 창의성

40) 강광하, "주민의 경제생활", 최명편 『북한개론』(서울:울유문화사), 234쪽.

41) 이만우, "북한의 자화상", 양성철·박한식, 앞의 책, p. 142

을 억누르고, 획일적인 강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모든 인민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주입·교육되고, 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다양한 평등이 아니라 획일적인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sup>42)</sup> 더욱이 애써 이룩한 사회경제적 평등의 성과는 심한 정치적 불평등의 존재에 의해 그 빛을 잃고 있다.<sup>43)</sup>

### III.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비추어 본 북한사회의 문제점

북한사회는 그 자체로서 볼 때, 사회경제적 평등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고 일반적으로 70년대 초반까지는 적어도 남한에 비해 뒤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체제는 경제발전이나 사회경제적 평등에 있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발전이 급격히 둔화·침체되고 있다. 둘째, 남한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여타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설혹 대내적 평등이 일정수준 성취되었다고 해도-국제적 비교에 따라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 균등한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수준이 주변의 비견할만한(Comparable)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때, 국제적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인민들의 불만이 누적, 폭발될 소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체제의 경제관리능력 및 정통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일부 계층이 누리고 있는 특권적 생활에 대한 일반인민의 불만과 노동계급이익의 우

42) 이만우교수의 방문기에 의하면 소련이나 중국을 방문해도 공적인 견해와 사적인 견해가 뚜렷이 구분되는데 반해, 북한인민의 경우 양자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같은글, 141쪽).

43) 이에 관해서는 강경인, 앞의 글 참조할 것.

선정책에 따라 '강요된 평등에 대한 신중간제급의 불만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70년대 중반까지 확보한 사회경제적 평등도 그 긍정적 효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이 둔화·침체됨에 따라 일반인민들의 삶이—타체제와의 비교를 떠나—'과거의 삶'에 비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체제에 일반적인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하자.

### 1. 경제발전의 둔화 및 침체

70년대 초반까지 북한경제발전의 성과가 괄목할만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제3세계국가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경제발전의 속도가 빨랐다는 상대적 평가를 의미한다. 체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볼 때 경제발전의 침체 역시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유위기로 인하여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각국은 자국의 경제침체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경제침체가 곧바로 체제의 정통성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국가가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기록하고 있을 때 어느 한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면 사정은 다르다. 북한의 경우 70년대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남한이나 중국 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낙후되기 시작했을 때, 북한인민의 삶은 기껏해야 '빈곤속의 평등'이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북한사회주의는 기존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성장하기엔 한계에 부딪쳤으며, 80년대에 제한적이거나 구조적인 재조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발전요소들의 투입 및 그 적용에 실패함으로써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관찰되는 "경제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화, 식량과 기본필수품에 대한 엄격한 배급, 심화되는 침체, 그리고 소비수준의

저하등”은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sup>44)</sup>

북한경제가 침체되게 된 구조적 원인에 관해 정대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주체경제에 입각, 자력갱생 생산원칙 하에 중공업우선정책과 생산의 양적 증대만을 도모하는 외연적 성장방식만을 채택하여 왔다. 자력갱생(自力更生)이란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 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은 실천단계에서 폐쇄적 자급자족경제체제로 구체화됨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조건 하에서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물론, 선진기술과 해외자본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킴으로써, 기술낙후, 자금부족, 설비노후, 이로 인한 성장둔화를 초래하게 하였다.<sup>45)</sup>

연하청은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폐쇄적 경제정책의 결과 거의 전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의 낙후와 생산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정책적 목적을 중시하여 운용된 결과 북한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셋째, 군수산업과 직결된 중공업우선정책을 추구한 결과, 경공업, 농업 및 사회간접자본이 만성적인 애로에 부딪쳐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기술진보 등을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보다는 경제선동과 주민동원을 극대화하여 투입하는 노동량의 증대를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율의 증가를 추구하는 ‘스타하노프주의(Stakhanovism)’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

44) Oleg Davydov,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대외정책”, 『북한체제의 변화:현황과 전망』, 499쪽.

45) 정대규,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동아연구』제23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1), 53쪽.

는데' 이는 경제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산동기를 고취시키는 데에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46)</sup>

이외에도 과중한 국방비부담, 80년대 합영법을 통하여 의도하였던 해외 자본과 투자유치의 실패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의 중단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지난 1-2년간 더욱 악화시켰다. 소련의 개혁·개방의 와중에서 1990년도 부터는 북한에 대한 특혜원조를 줄이고, 석유공급에 관해 세계시장가격에 입각한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봉착하고 있다. 이로 인해 90년도의 대북한석유공급이 종래의 140만톤에서 44만톤 규모로 격감하여 북한의 에너지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sup>47)</sup> 그 결과 전력생산이 크게 감소했고 산업시설가동률도 45%를 밑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1990년에 이르러서는 분단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처해 있으며 1990년도에는 경제가 - 3.7%로서 부(負)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다.<sup>48)</sup>

<sup>49)</sup> 올레그 다비도프에 따르면 중폭된 경제위기는 생산량의 감소로 나타났고 북한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쌀 수확량은 80년대 600-650만톤으로부터 1990년에는 500만톤으로 줄었다고 보고 되었다. 매일 일인당 곡식배급량도 450-500g으로 감소되었다."<sup>49)</sup>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도 나름대로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외부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일본수교나 북한-미국수교 협상에서 보인 전진적인 자세,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채택,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의 추진등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연하청, "사회주의 경제계획", 『북한개론』, 165-66쪽.

47) 정대규, 앞의글, 62쪽.

48) 앞의 글, 54, 37쪽.

49) 올레그 다비도프, 앞의 글, 499.

그러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자유화의 물결은 물론, 여태껏 이룩한 북한사회의 평등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개혁·개방-정치적 민주화와 자유의 고취-의 와중에서 명시적이지 않지만 포기한 것은 평등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빈곤속의 평등'을 고수하느냐 '풍요속의 불평등'을 선택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 중공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도 궁극적으로 두개의 대안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으로 풍요한 소비생활-특히 내구소비재인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등의 광범한 보급-은 불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가령 자가용의 보급에 있어서 미국이 1920년대에 도달했던 단계를 소련은 1970년이나 겨우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관해 서구를 자주 왕래하는 소련의 작가가 1967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태리나 프랑스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된다. 물론 상당한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충분히 빠르지는 못했다."<sup>50)</sup>

교통·통신혁명에 따른 잦은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세계가 지구촌(地球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들은 인위적으로(?)강요된 평준화된 삶을 누리고 있었으나, 서구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생산력의 발전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이태리나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물질적소비생활을 소련의 경우 특권계층이나 간신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들은 '빈곤 속의 평등'보다는 차라리 '풍요 속의 불평등'을 원하게되어 단기적인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도 경제발전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

50) Sweezy, 앞의 책, p. 24에서 재인용.

의 도입 및 경제의 사영화를 추구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유감스럽게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심지어 잠재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보장도 위협하는 실업을 포함하여) 불평등한 분배를 전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1970년에 폴란드의 고물카 (Gomulka)정권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질적 자극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을 독려하는 개혁조치를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간에 냉소적인 반응중의 하나는(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공산주의가 일하는 것보다 더 낫다(Communism is Better than Working)”라는 슬로건이었다.<sup>51)</sup>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경제의 사유화를 포함하여)물질적 자극을 도입하는 조치는 일반인민의 생산동기를 강화시키기는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1987년 이후 등소평체제 하의 중국이 누리고 있는 비약적인 경제발전도 모택동의 ‘평균주의(平均主義)’적 이상을 거부하고 인민들의 이기심에 의존한 경제개혁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sup>52)</sup>

따라서 현존사회주의 체제의 실패는 경제발전과 기술의 발전은 일정한 불평등을 필요로 한다는 우파의 일반적 견해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빈자가 자신들의 상대적 빈곤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체제를 인용(忍容)하는 것은 그들의 부유한 이웃이 ‘오늘’ 즐기는 것-자가용, 칼라 텔레비전등-을 ‘내일은’ 자신들도 즐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떠맡지 않았을 생산활동에 몰두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감내

51) 앞의 책, p. 40에서 재인용.

52) 李君如,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평등관념에 대한 시론”, 『社會科學』(1988年 第8期); 『중소연구』12권 4호에 번역수록됨. 마르크스의 낙관적인 예언과는 달리, 역사상 실현된 사회주의체제는 노동의 소의를 극복하지 못했고, 따라서 사회의 성원들에게 이기적인 동기를 떠나서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일까?

하는 것이다.<sup>53)</sup> 또한 체제는 빈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체제위기로 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민음을 주입시키고, 나아가 이를 실현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sup>54)</sup>

## 2. 국제적 불평등의 심화

### (1) 소련, 동구 및 중국에 비한 상대적 불평등의 심화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북한인민들에게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임박한 개혁·개방에 대한 예측이 틀리지 않은 것은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서 북한은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전통적 우방인 소련, 중국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을 하는 도미노현상 속에서 북한만이 '우리식대로 살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sup>55)</sup>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한 상대적 빈곤감은 북한의 유학생들에게 현저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련 및 동구를 유학중인 북한학생들이 소련 및 동구권의 높은생활 수준, 풍부한 물건, 자유로운 생활 등을 목격할 때 이를 북한인민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우선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들이 북한인민들보다 일

53) Albert Borgmann, "Technology and Democracy", M.E Kraft and N. J. Vig, eds., Technology and Politics(Durham:Duke University Press, 1988)p. 69.

54) 이 점에서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즉 성장의 중단은 자본주의의 죽음을 의미한다.

55)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관해서는 김남식,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변할것인가," 『역사비평』(1990년 가을), 18-29쪽;정대화,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 정치구조의 변화," 『역사비평』(1990년 가을), 30-43쪽 참조.

을 적게 하면서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에 관해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한 유학생은 모스크바의 첫인상을 천국에 온 느낌이라고 술회하고 있다.<sup>56)</sup> 게다가 동구권 국가의 인민들이 북한에 비해서 훨씬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비해서 열악한 삶에 불만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를 거리낌없이 비판하는 것에 관해서 충격을 받는다.<sup>57)</sup> 그 경우 자연스럽게 공격의 화살은 동구인들보다 훨씬 일을 열심히 하는 북한인민들이 아니라 이들을 동원하여 정치를 하는 엘리트에게 향하게 된다.<sup>58)</sup>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전화하게 되어, 북한유학생들은 북한 엘리트들이 누리는 초호화판 생활과 김부자의 개인승배를 위한 기념비 건설사업에 쓰이는 북한정권의 엄청난 자기과시적 소비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김일성 생일날 주는 특별배급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느끼게 된다.<sup>59)</sup> 따라서 국내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반감감정으로 고조되게 되고 어릴 때 부터 익힌 개인승배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고 만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잠재적 엘리트인 유학생들은 북한에 되돌아가 후진적인 북한의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희망보다는, 국내에 존재하는 김일성체제의 어마어마한 구조에 대한 도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되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망명을 선택하게 된다.<sup>60)</sup> 북한으로서는 선진문물을 흡수하는 주요한 통로중의 하나가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인데, 이들의 망명을 두려워 한 나머지 기존의 유학생을 소환하거나 유학생파견을 중단하게 되면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따라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56)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52쪽.

57) 같은 책, 151, 155쪽.

58) 같은 책, 155, 157쪽.

59) 같은 책, 154, 157, 166쪽

60) 같은 책, 161쪽

더욱이 북한 유학생들이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공항에 마중 나온 중앙 당 간부들이 “유학생 보고 듣거나 알고 있는 그 나라의 실상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 망명 유학생은 전한다.<sup>61)</sup> 즉 북한의 핵심 당 간부들 역시 국제적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일반인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불안 내지 동요요인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같은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비교는 북한에 중요한 체제 동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인민들은 70년대까지도 북한보다 훨씬 낮은 생활수준을 누렸으나, 개혁·개방후에도 중국이 잘 산다는 사실이 점차 북한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 관한 사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과의 왕래를 통해서 쉽게 알려지게 된다. 모택동이 살아 있을 때는 중국의 많은 조선족이 살기 힘들어 북한으로 월경(越境)했는데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인민들의 삶이 개선됨에 따라 월경하는 조선족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고 식량사정이 훨씬 좋아졌다는 말이 쉽게 들리게 된다.<sup>62)</sup> 79년에 월남한 안찬일도 중국의 “식생활문제는 북한에 비하면 지상낙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63)</sup>

더욱이 1989년에 북한이 개최한 평양축전은 동구권과의 비교를 일반인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계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평양축전을 계기로 일반 북한인민들이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일반인민들은 이 축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물자절약, 노력동원, 식량배급 감축 등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지만 실제 그들이 얻은 것은 없었다. 더욱이 방문한 외국인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가게진열장을 평소에 북한주민이 볼 수 없었던 상품으로 가득 채운 결과 “북한인민들은 북한이 이

61) 같은 책, 161쪽.

62) 같은 책, 80-81쪽

63) 안찬일,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오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날조,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73쪽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선전이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다비도프는 지적하고 있다.<sup>64)</sup> 심지어 북한의 당 간부들도 “남한의 올림픽은 부조반은(돈을 버는)잔치, 평측은 손해보는 잔치”라고 말했다고 망명한 북한 유학생은 말하고 있다.<sup>65)</sup>

## (2) 남한과의 상대적 비교

일반적으로 70년대 초반까지 북한경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북한 인민들의 삶도 남한인민들의 삶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뒤지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있다.<sup>66)</sup> 그러나 남한이 60년대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70년대 중반을 계기로 남한의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이 북한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안찬일은 70년대초까지는 경제력에 있어서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경제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sup>67)</sup>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나는 남한의 2천만은 훨씬 더 잘 살고 1천만은 비슷하고 나머지 1천만은 직업과 주거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다. 식생활, 의생활 수준은 우리 4천만 모두가 북한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sup>68)</sup> 남한인들의 일반적 삶이 북한인들의 삶보다 윤택하다는 사실은 북한당국의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외국에 나간다는지, 라디오를 통해서라든지, 심지어 북한 텔레비전방영을 통

64) 다비도프, 앞의글, 506-07쪽;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59-60쪽

65) 같은책, 161쪽

66) 안찬일, 앞의글, 172쪽.

67) 같은글, 172-73쪽.

68) 같은 글, 179쪽.

해서도——북한인민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한인들의 삶이 북한인들의 삶보다 윤택하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당국이 북한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가 되며, 분단국으로서 체제경쟁의 입장에 있는 북한체제의 정통성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련이나 동구에 간 북한유학생들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우수한 남한 상품을 통해서, 타국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타국유학생들이나 현지인들이 남한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같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술회도 있다.<sup>69)</sup>

북한을 떠난적이 없는 일반인민들도 남한에서 데모하는 장면을 방영하는 북한의 텔레비전 방영을 보는 도중에서 남한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거리 풍경을 통해서 남한이 생각보다 잘 사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더욱이 1985년 고향방문의 옷을 통해서도 남한인들의 윤택한 삶을 알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sup>70)</sup> 한 망명북한유학생은 “평양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71)</sup> 남한이 북한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못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자, 그다음부터는 “남한의 거리나 사람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에 방영할 때는 아주 흐리게 빨리 지나가게 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자주 데모하는 모습을 보는 과정에서 북한인민들은 남한에도 자유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

69)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57-59쪽.

70) 같은책, 149쪽.

71) 같은책, 160쪽.

다.<sup>72)</sup>

게다가 89년 평양축전을 전후한 임수경의 방북이 북한당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월남한 임정희의 고백에 따르면 임수경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했다기 보다는 '생각하는' 북한인민들에게 북한체제의 의구심-반공의식(?)-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도 보인다: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그 먼 나라를 돌아 평양에 올 수 있었으며, 북한이 더 살기 좋다면 왜 이곳에 남지 않고 굳이 돌아가려고 하는가……임수경양이 돌아간 후에도 한국정부가 부모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임수경양의 부모가 당연히 감옥에 갔거나 사형을 당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이다.<sup>73)</sup>

이러한 이유로 북한엘리트들은 북한인민 일반의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시선을 촉발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교류를 필요이상(?)-아니 체제유지의 필요상(!)-주저하고 삼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미국, 일본등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비교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인민들이 미국, 일본 또는 서구선진국가들의 우월한 생활수준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생활상의 불만을 누적·폭발시키지 않을 것이다. 애당초 일본이나 서구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북한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체제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일반인민들이 서구자본주의국가와 접촉

72) 같은책, 149쪽.

73) 같은책, 149-50쪽; 170쪽도 참조.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높은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체제동요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 및 동구에 유학갔다가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유학생들의 경우도 소련 및 동구인들의 삶을 북한인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것이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전화되었던 것이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삶과 북한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북한 유학생들이 서구인들의 우월한 삶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당초 구미나 일본은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엘리트들이나 일반인들도 중국적으로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비교·평가를 뿌리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자유의 측면에서나 우월한 삶을 누리던 동독이나 체코의 국민들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체제를 버리고,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택한 대안이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 방향으로 근접하는 것에 관해서 북한의 엘리트나 일반인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회주의체제는 타당하나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북한이 주변국가나 선진자본주의국가들보다 열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인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론에도달한다면, 단순히 정권차원에서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자체의 정당성이 의문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문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위기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엘리트의 실정(失政)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체제자체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는 혁명적 사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력의 우월성과 마찬가지로 일본 및 구미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의 비교는 잠재적으로 북한체제를 그 뿌리로부터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민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가 본단의 '원흉'인 제국주의 미국이라는 사실과 북한인민들이 얻기 힘든 귀중한 소비품들을 외국인을 주상대로 하는 '달리자점'에 가면 뭐든지 살 수 있어서 '달리가 날개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북송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보내온 송금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나 일본제 소니 라디오가 북한인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다는 사실은 과거 36년동안 한반도를 강점·수탈한 일본제국주의자의 모습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sup>74)</sup> 나아가서 미제국주의자의 '괴뢰'인 '남조선'정권과 그 남한에서 생산된 상품의 우수성과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지불협 상태(認知不協狀態:Cognitive dissonance)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기만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되어 서구와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하게 될 경우 이러한 인지불협상태가 체제에 대한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은 현재처럼 폐쇄상태에 일반 인민들을 가두어 놓은 경우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3. 체제내 불평등의 심화

사회주의국가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계급질서를 전복하였지만, 불평등의 표현인 계층마저 없애는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경우도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노동당의 집권이 장기화함에 따라 당-국가 간부들이 특권계급화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승배, 김정일의 권력세습, 김일성의 친·인척이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직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현상이겠지만, 대체로 당과 국가의 간부인 북한의 특권층은 대학진학, 특호주택, 적색진찰권, 전용의료기관,

74) 같은책, 150쪽.

특별지정석, 특수학교교육, 특별정양소와 휴양소, 승용차, 전용백화점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일반 인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sup>75)</sup>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특권적인 혜택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인민들의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체재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북한인민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 특권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용인될 수 있겠지만,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누리는 특권적인 혜택은 쉽게 체제비판의 소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망명유학생들이 북한경제의 침체상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김일성이나 당간부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sup>76)</sup>

이른바 “칠부가족”이라고 불리는 중앙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즉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경우 외에도 잘사는 계층이 보이는데, 이는 주로 중국사람, 귀국동포, 리비아나 시베리아 등 외국가서 돈벌어 온 사람들, 운전수가 잘 산다고 한다.<sup>77)</sup> 중국사람이 잘사는 이유는 주로 물자부족상황에서 암거래상으로 일하기 때문이며, 귀국동포는 외국으로 부터 송금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이고, 외국에서 돈벌어 온 사람들의 경우도 외화를 벌어들여 오기 때문이며, 운전수는 직접적으로 물건의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쉽게 빼돌릴 수 있거나 외국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들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일반적

75) 도홍렬, “북한의 사회구조와 체제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1:1(통일원: 1989년 봄), 210쪽.

76)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54, 160, 165쪽.

77) 같은책, 105, 108, 114, 150쪽.

으로 북한이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외국과 일정한 연관을 맺는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인민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평양은 낙원이다’라는 것이 허구임을 일반인민들에게 주지시키는 정포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계층의 존재에 관해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집단으로서 서재진은 근로인테리계층을 들고 있다. 서재진은 소련·동구 변혁에 있어서 개혁의 주도세력으로서 신중간계급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북한에서 신중간계급의 성격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북한의 신중간계급은 2원화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핵심당원, 군부엘리트, 3대혁명소조원등은 보수지향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외교관, 유학생, 해외근로자, 외국군사고문, 기술관료의 일부등이 개혁지향적이라고 한다. 서재진은 “최근 남한의 신중간계급은 대체로 개혁지향에서 안정지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sup>78)</sup>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근로인테리에 해당하는 신중간계급 등 전문직종은 기능상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의 원칙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수를 받음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sup>79)</sup> 그렇기 때문에 신중간계급은 한편으로 노동계급위주의 계급정책때문에 위축되며, 다른 한편 정치·경제적 특권을 사실상 독점한 권력엘리트와의 관계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신중간계급 또는 인테리들의 북한에서도, 소련 및 동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혁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세력의 배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sup>80)</sup> 그러나 이들의 반체제성향은 엘리트내의 갈등

78) 서재진, 앞의 글, 592-93쪽.

79) 같은글, 593쪽.

8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같은 글, 596-612쪽 참조.

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인테리의 주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일부가 남한으로 망명하는 것은 체제개혁의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에 기인한 것이었겠지만, 동구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1989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이 북한으로 송환조치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내에서 조직을 결성하여 반체제 개혁세력으로 성장할 소지는 항상 내연(內燃)하고 있다고 보인다.

81)

#### 4. 과거와 비교한 경제의 악화문제

최근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북한에 일시 귀국했을 때 일반인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sup>82)</sup> 북한체제가—특히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외부세계의 실상을 잘 모르는—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을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 공산정권 하에서의 삶이 과거 이조의 봉건체제나 일제시대의 삶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것이 김일성이 이끄는 조선 공산당의 업적이라는 것이었다.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정권은 끊임없이 일제시대의 수탈상에 관해서 그리고 6.25당시 미군의 폭격상에 관해서 일반인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김일성정권은 일제의 수탈에서 인민을 해방하고 미공군의 포화로 인해 폐허가 된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오늘의 삶이 가능하도록 한 자신들의 업적을 찬양하는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 인민들은 끊임없이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는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세뇌당하고, 김정일이 창안했다고 하는 이른바 “지금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하다고 한다. 이러한

81) 같은글, 598—99쪽.

82)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59—61쪽.

현상을 총칭하여 이만우는 ‘평양의 낙원 콤플렉스’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sup>83)</sup>

그러나 경제침체로 인해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 나가 보지 않은 북한인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불만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월남한 최봉례씨는 10년전보다 북한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후진했다고 주장한다.<sup>84)</sup> 개성시 간호원이었던 임정희도 개성시의 일반적 생활에 관해서 “처음에는 계란이 공급될 정도로 공급상태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sup>85)</sup> 또한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시 귀국해 보니 유학을 떠났을 때보다 생활수준이 못했다는 지적이 빈번히 나오고 있다.<sup>86)</sup> 그리고 생활수준의 악화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쉽게 김정일에게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유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70년대 초에는 북한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점에서 고기나 사탕도 살 수 있었고……. 그러니까 김정일이를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김정일이가 72년에 비서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운동을 많이 벌였단 말입니다. 70일전투, 백일전투, 2백일전투, 기념비만 만들고, 그러니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이가 혈기가 있어 사업할 때에는 어느정도 경제법칙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라가 발전했다면 김정일이가 올라가서는 고생을 못해 보고 똬가 배우지도 못한 것이 하다 보니깐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한 뒤부터는 못살게 되니까 미워하게 되

83) 이만우, 앞의글, 143, 146쪽.

84) 『북한, 그 충격의 실상』, 92쪽.

85) 같은책, 150쪽.

86) 같은책, 159-161쪽.

는 것입니다. 인테리들도 철 없는 아이가 정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sup>87)</sup>

따라서 88년 7월에 평양에 가서 실제 생활수준이 유학을 떠나기 전보다 나빠진 것을 발견한 다른 망명유학생은 “김일성이 죽으면 혹시 뭔가 될지 모르지만 김정일이가 대를 이을 후계자인 한 북한은 ‘희망이 없는 체제’라는 것으로 단정하게”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망명동기를 암시하고 있다.

안찬일은 70년대초까지 북한이 잘 살게 된 이유에 관해서 초기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한 북한주민들은 그 동기가 분명했고 또 생산량이 올라가는 것만큼 실제로 분배량도 결정되어 생활이 향상되었는데 반해 북한경제는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 “나름대로 복지부분 확대에 지나친 투자”, “3대혁명소조 파견으로 당, 정권,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기존질서의 급격한 파괴”, “생산참여동기의 상실”등의 이유로 70년대 이후 낙후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88)</sup>

87)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65쪽.

88) 안찬일, 앞의글, 173쪽.

## IV. 맺는 말

북한의 개혁·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동구제국과는 달리 공산혁명 전 다원주의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 공산주의 체제창출을 직접 주도하였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급선회할 경우,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어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혁명 1세대, 곧 김일성일파가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점, 산업화의 정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항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사회주의 건설의 이념-골주체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북한체제가 일찍부터 소련 및 중국으로부터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도미노 현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점, 북한체제가 성공적으로 인민들을 의부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었고,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대감, 특히 반미, 반일의식을 일반인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주입시켜 자본주의체제의 문물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방에 관한 열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북한체제가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력갱생정책으로 소련 및 동구와는 달리 최근까지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북한체제가 개방을 부분적으로 시도했던 경우 미국, 일본, 남한등이 굴욕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등 실제로 남한 및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체제가 사실상 북한을 효과적으로 고립시켜 오지 않았나 하는 점, 마지막으로 사실상 개혁·개방을 시도할 경우 견장을 수 없는 변혁과정으로 인해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노동당이 정권을 상실하는 것에 관해 지닌 두려움 등이 얼핏 떠오르는 이유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체제는 70년대 초반까지 성취했던 업적들의 긍정적인 효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제발전의 둔화, 남한, 중국,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 당과 국가의 엘리트의 특권계급화와 계층간의 불평등의 심화, 개혁·개방을 둘러싼

엘리트간 갈등의 내연, 생활고로 인한 일반인민들의 누적되는 불만의 폭발가능성, 북한체제를 물적·정신적으로 지원하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고립과 폐쇄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등의 이유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며, 단지 개혁·개방의 시기, 방법, 전개양상 등이 문제될 뿐이다. 91년 후반부터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활성화하고, 북한-일본 및 북한-미국 수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개혁·개방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엘리트들 역시 뒤늦게나마 과거처럼 일반인민에게 '금육성'과 '사회주의적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꾀하는 정책은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전시효과의 위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지구촌의 상황 하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인간의 '탐욕성'과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경제발전의 채적으로 삼아 개혁·개방의 모험을 감수하는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은 김일성-김정일 후계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산국가와는 달리 추가적인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겠지만, 북한체제에 변혁이 일어날 경우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대체로 두가지의 예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중국식의 모델에 따라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체제전복에 의한 개혁·개방일 것이다.<sup>89)</sup> 북한이 소련·동구식의 급격한 개혁·개방보다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곧 공산당주도하의

89) 북한이 소련이나 동구권의 국가들처럼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자유화 등을 포함하는 급격한 변혁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대표적으로 다원주의적 경험의 부재-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현 엘리트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의사도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할 능력이 있는 독자적인 시민세력 역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개혁과 개방-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남한의 관측가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 같고, 이러한 예상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sup>90)</sup>

하지만 중국은 이미 10여년전부터 등소평이 이끄는 공산당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응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개혁에 이니셔티브를 취했고, 개혁의 성과로 인해 공산당이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체제의 안정과 후계구도의 구축에 전념한 결과 외부의 변화나 국내의 새로운 요구에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체제내부에 축적되어 체제의 역동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 체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일단 문을 열어 일반인민들이 외부사회와 많이 접하게 되고 나아가 외부사회와 북한의 실상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개혁·개방의 압력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세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중국공산당이 시간을 벌면서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하던 70년대 후반의 국제적 상황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특징지어지는 90년대 초반의 국제적 현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후계체제는 김일성체제와는 달리 나름대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중국식 모델을 추구할 수 있는 통치능력이 존재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우호적인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개혁·개방이 지연될수록 중국식의 모델을 추구하여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지체하다가 또는 개혁·개방의 와중에서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인민들의 봉기에 의해서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정권처럼 급격히 붕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성숙한 '시민사회'에 기반한 개혁주도세력이 형성되어 평화적으로 노동당정권을 대

90) 가령 정대규, 앞의글, 72-73쪽; 최동희, "북한의 변화가능성", 『통일문제 연구』2:1(1990년 봄), 219쪽 참조.

체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다면, 북한체제가 일시에 남한체제에 흡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한 망명유학생의 전언대로 “10년내에 북한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변할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sup>91)</sup>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봉기에 의한 체제전복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된다.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잘 살던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것은 한편 서독정부의 치밀한 통일정책에서도 기인하겠지만, 다른 한편 동독인민이 스스로 개혁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서독과의 통일과 서독의 주도에 의한 개혁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체제는 북한인민에게 서독체제가 동독인들에게 느꼈었던 것처럼 매력적이지 않고, 남북한관계는 동서독관계처럼 기본합의서의 채택과 성실한 실천에 의한 신뢰조성과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성취하지 못했고, 나아가 남한체제는 북한체제를 흡수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서독만큼 관리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통치엘리트의 실책에 의해 대안없이 자포자기식으로 붕괴된다면,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전복되고, 남한은 흡수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받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글쓴이에게는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단순히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처럼 절박하게 여겨진다.

위에서 말한 식의 흡수통일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과 합의에 의한 유럽공동체식의 통일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남한체제나 북한체제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견잡을 수 없이 닥칠지도 모르는 흡수통일에 대비하면서, 단기적으

91)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60쪽.

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남한의 일반시민과 정권이 북한체제의 잠정적(?)유지라는 목적하에 북한이 자생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개혁·개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흡수통일에 의한 정치적 무질서와 경제적 혼란에 따른 남북한 인민의 희생과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만을 바라지 말고, 남한의 정권이나 일반시민 모두가 남한체제를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남한시민들은 물론 북한인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하는데 전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엘리트가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정치인들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자주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돕거나 또는 남한체제를 북한인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만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